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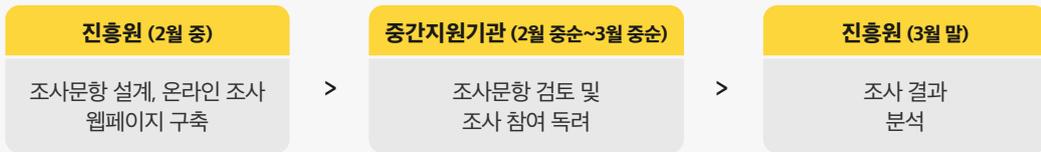
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정책 이용현황과 과제

정책연구본부 조사연구팀

☑ 조사배경 코로나19 지속·확산으로 상당수 사회적경제기업이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(대출/보증 등)을 이용해왔으나, 대출 만기 및 이자상환일이 임박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

☑ 조사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/보증 등 금융지원 정책 이용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, 지원 대책 등 정책수립 지원

☑ 추진체계 중간지원기관 협조를 통해 조사문항 적절성 제고 및 응답자 조사참여 독려



☑ 조사대상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 등

☑ 조사기간 2.18.(금) ~ 3.11.(금) 약 3주 간(온라인 설문조사)

☑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(네이버폼 활용)

☑ 조사표본 1,493개 사회적경제기업('21년 구축한 조사 Pool 활용)

☑ 응답기업 총 462개 사회적경제기업(응답률: 30.9%)

☑ 대출/보증 이용유형 사업자보증 및 대출 124개(26.8%), 과거 대출/보증 활용 47개(10.2%), 주주·임원·종업원 대여금 12개(2.6%) 순

☑ 정책 만족도 정부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.49점으로, 만족한다는 답변이 약 10.8%인 반면,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약 45.5%

☑ 정책 수요 정책자금 추가공급(43.6%),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(26.9%), 장기분할 상환제도 도입(20.0%) 등 추가조치 희망

☑ 개선과제
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원요건 완화, 신청절차 간소화, 정책홍보 강화 등 대안 마련
 ② 정책자금 추가공급,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연장, 장기분할 상환제도 도입 등 추가조치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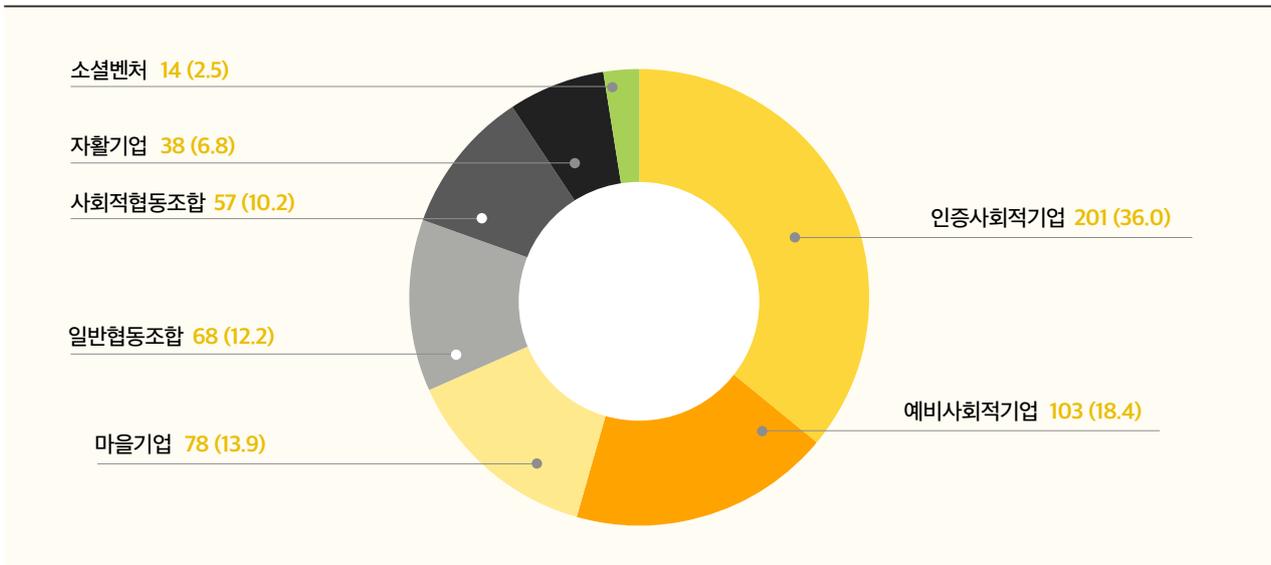
I. 응답기관 일반현황

1 응답기업 유형

총 462개 기업이 응답(응답률 30.9%)하였으며, 이 가운데 인증사회적기업이 201개소(36.0%)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예비사회적기업(103개소), 마을기업(78개소), 일반협동조합(68개소) 등의 순

<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응답현황>

n=462, 단위 : 개소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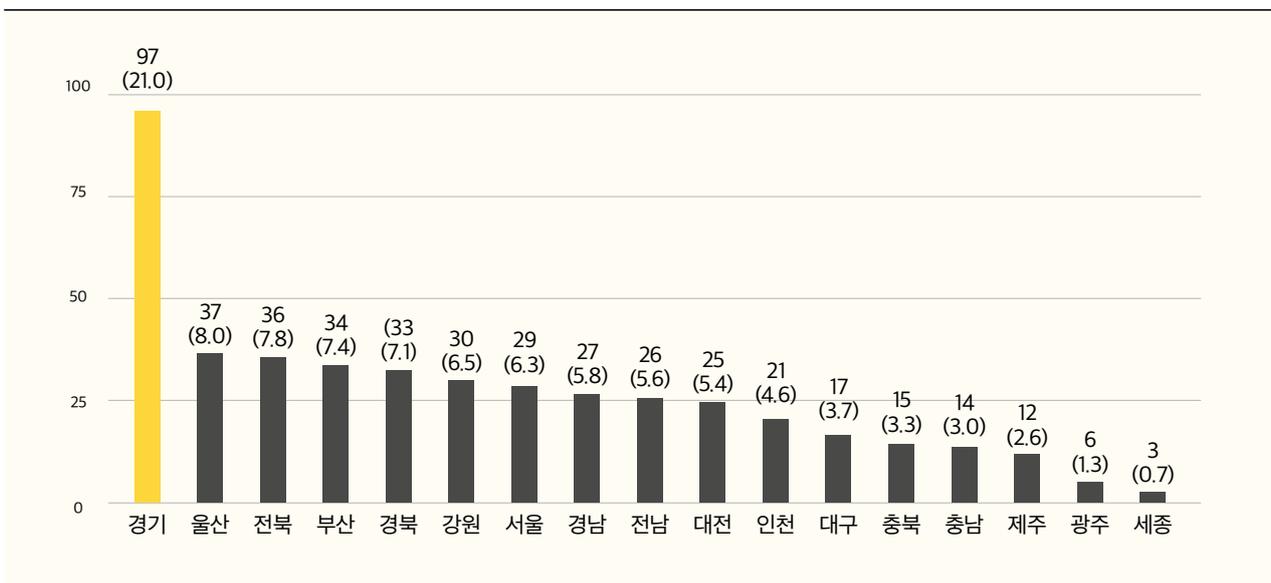
* 복합유형 (사회적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인 경우 등)이 존재하므로, 유형별 합계는 총 응답기관 수보다 큼

2 지역별 분포

지역별 분포는 경기도에 소재한 응답기업이 97개(21.0%)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울산(37개소), 전북(36개소), 부산(34개소), 경북(33개소) 등의 순

<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응답현황>

n=462, 단위 : 개소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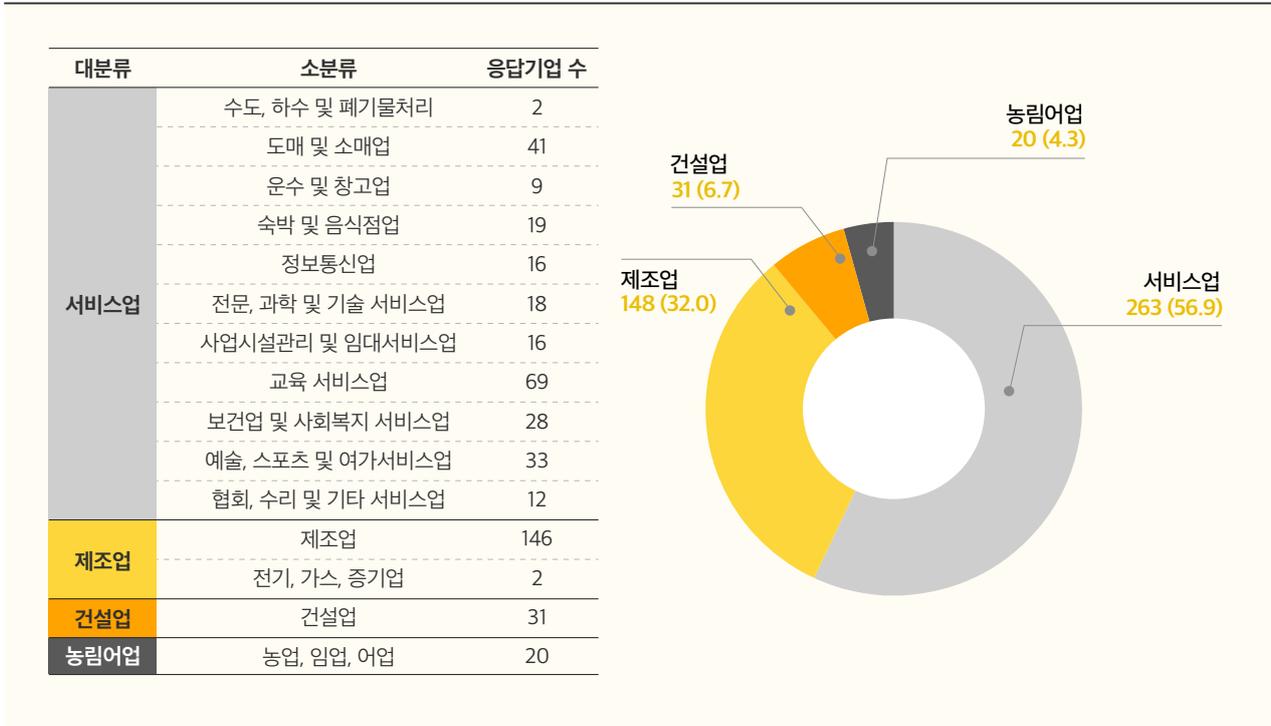


3 업종별 분포

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체의 약 56.9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제조업(32.0%), 건설업 (6.7%) 등의 순

<업종별 응답현황>

n=462, 단위 : 개소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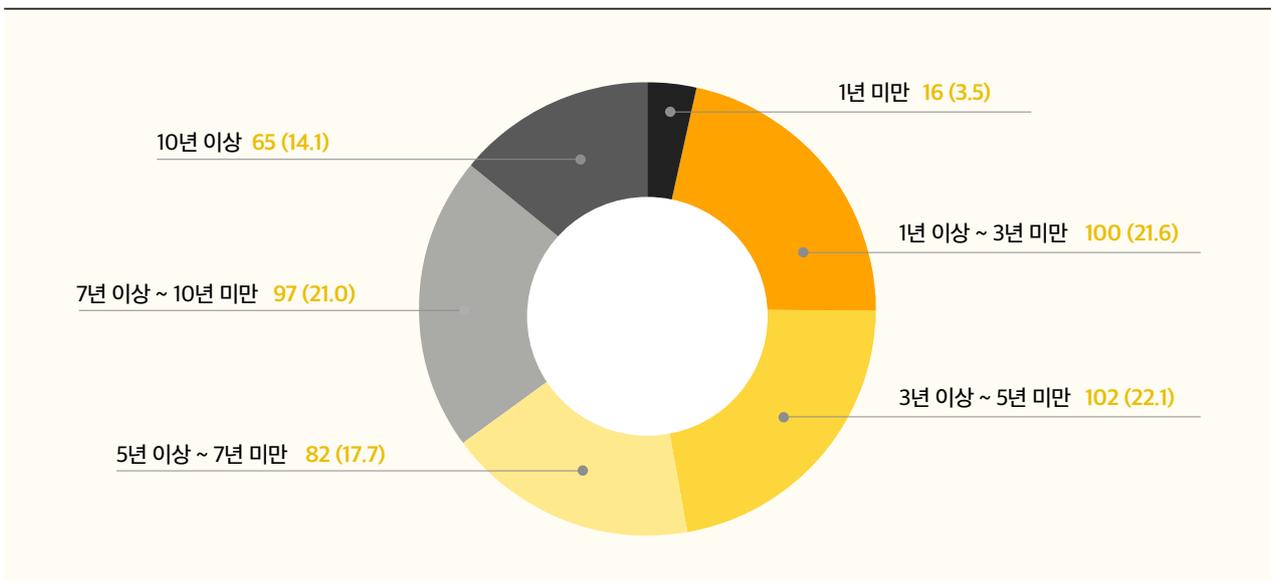


4 업력별 분포

응답기업의 업력은 설립 1년 미만 기업이 전체의 3.5%로 가장 적었던 반면, 그 외 범주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

<업력별 응답현황>

n=462, 단위 : 개소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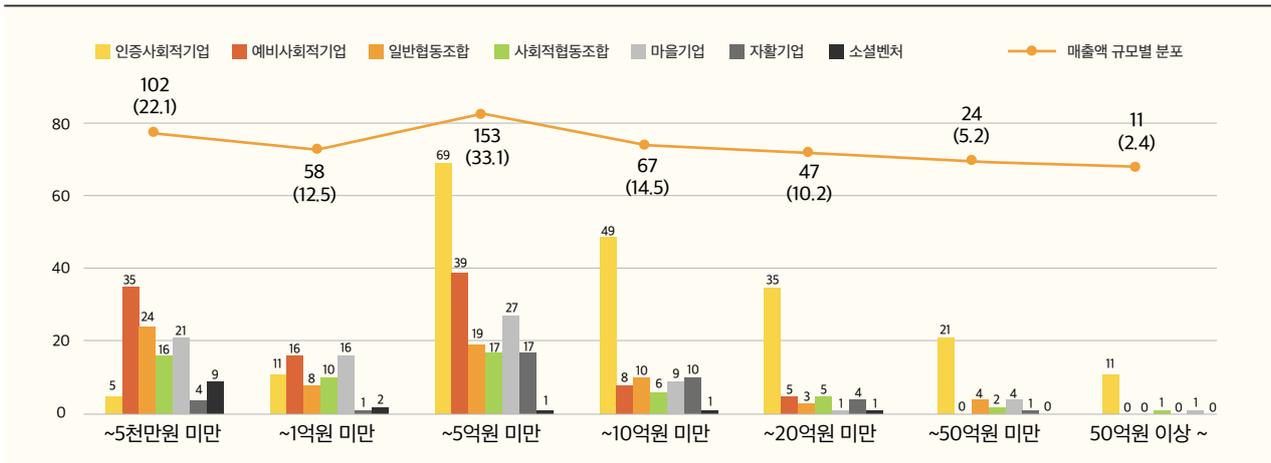


5 매출액 규모

- 응답기업의 매출액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업이 153개소(33.1%)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5천만원 미만 (102개소, 22.1%), 5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(67개소, 14.5%) 등의 순
- 기업 유형별로는 타 유형 대비 인증사회적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, 전체 응답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의 약 67.7%가 인증사회적기업
- 소셜벤처의 경우 매출액 1억원 미만 범주에 주로 분포

<연간 매출액 현황>

n=462, 단위 : 개소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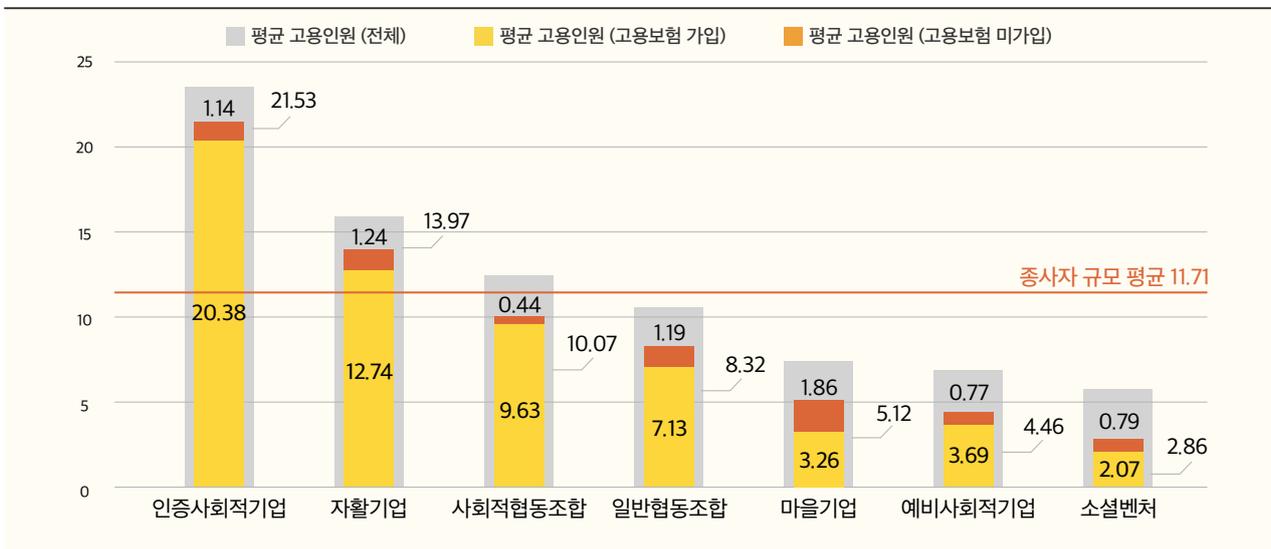
* 복합유형이 존재하므로, 유형별 합계는 매출액 응답기관 수보다 큼

6 종사자 규모

- 응답기업의 종사자 규모는 평균 11.71명, 최소 0명에서 최대 508명까지 기업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사자는 평균 10.55명, 미가입 종사자는 평균 1.16명으로, 전체 근로자의 약 90.08%가 고용보험에 가입
-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로는 인증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이 21.53명으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자활기업(13.97명), 사회적협동조합(10.07명) 등의 순

<종사자 규모>

n=462, 단위 : 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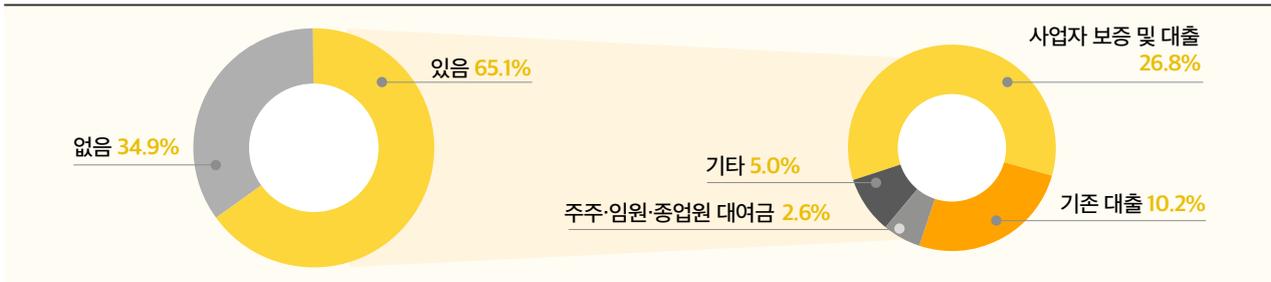


1 코로나19 이후 대출/보증 상품 이용 경험

- 코로나19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대출/보증 상품을 이용한 기업은 총 161개 사업체로, 응답기업의 약 34.8%에 해당
- 대출/보증 상품을 이용한 기업 중 신규로 사업자 보증 및 대출을 받은 기업이 124개(26.8%)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'20년 이전 대출/보증을 활용한 경우가 47개(10.2%), 주주·임원·종업원 대여금을 활용한 경우가 12개(2.6%) 순

<대출/보증 이용경험>

n=46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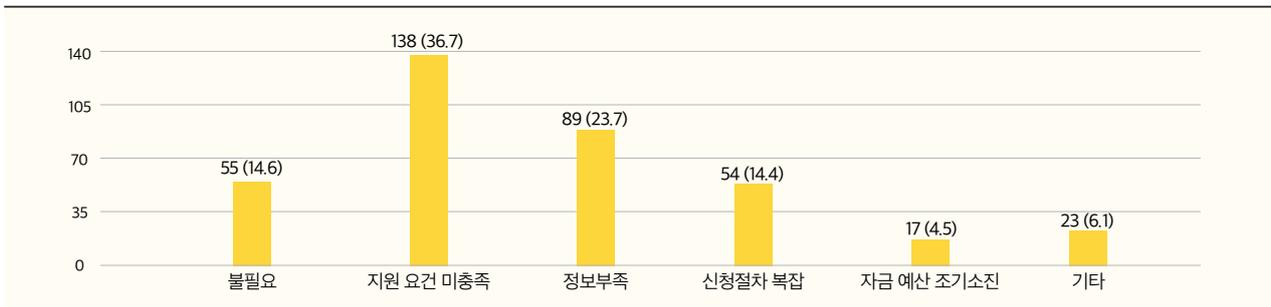
* 중복응답 포함

2 금융지원 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

- 대출/보증 등 금융지원 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기업 중 대출/보증 등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는 약 14.6%에 불과
- 실제로는 지원요건에 미달(36.7%)하거나, 관련 정보 취득이 어려웠거나(23.7%), 신청절차가 복잡했기 때문(14.4%)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

<금융지원 상품 미이용 이유>

n=301, 단위 : 개소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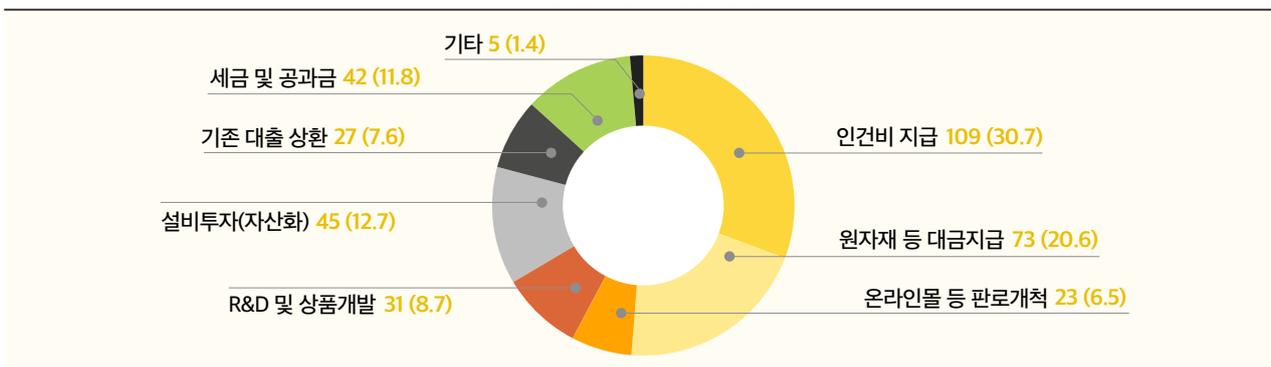
* 중복응답 포함

3 대출/보증 이용목적

- 대출/보증 등을 이용한 주 목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전체 응답의 약 30.7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원자재 등 대금지급(20.6%), 설비투자(12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<금융지원 상품 이용목적>

n=161, 단위 : 개소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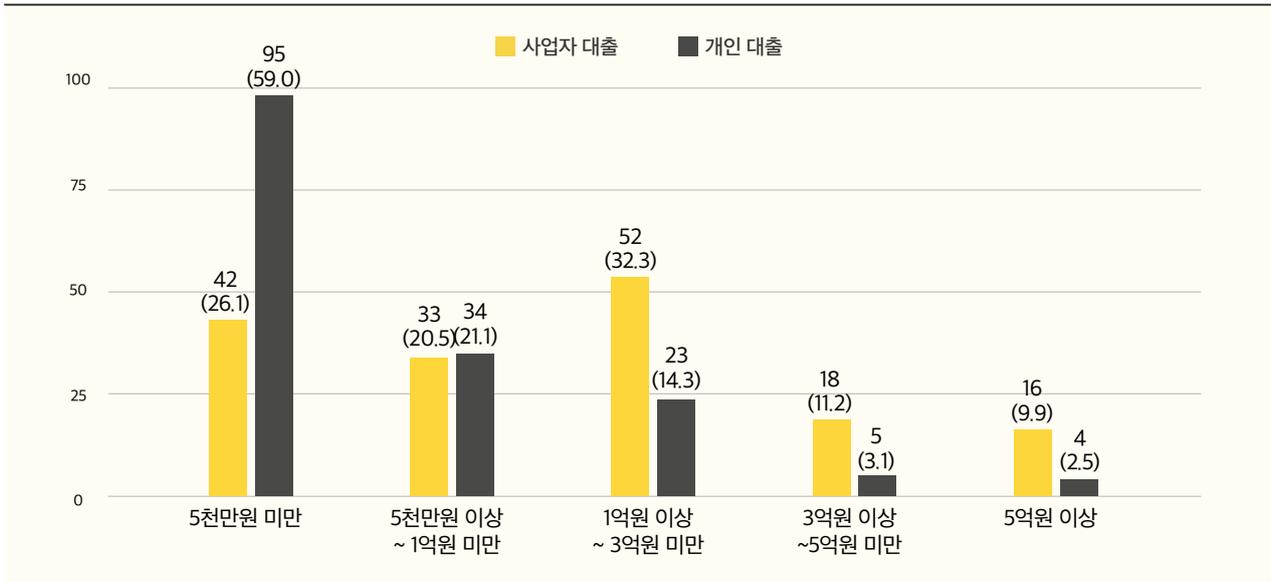
* 중복응답 포함

4 대출/보증 금액

- 사업자 대출 규모는 1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이 52건(32.3%)으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5천만원 미만(26.1%),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(20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5천만원 이상 개인대출을 이용한 경우도 66건(41.0%)으로 상당수 기업이 기업경영을 위해 개인대출을 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
<대출/보증 금액>

n=161, 단위: 건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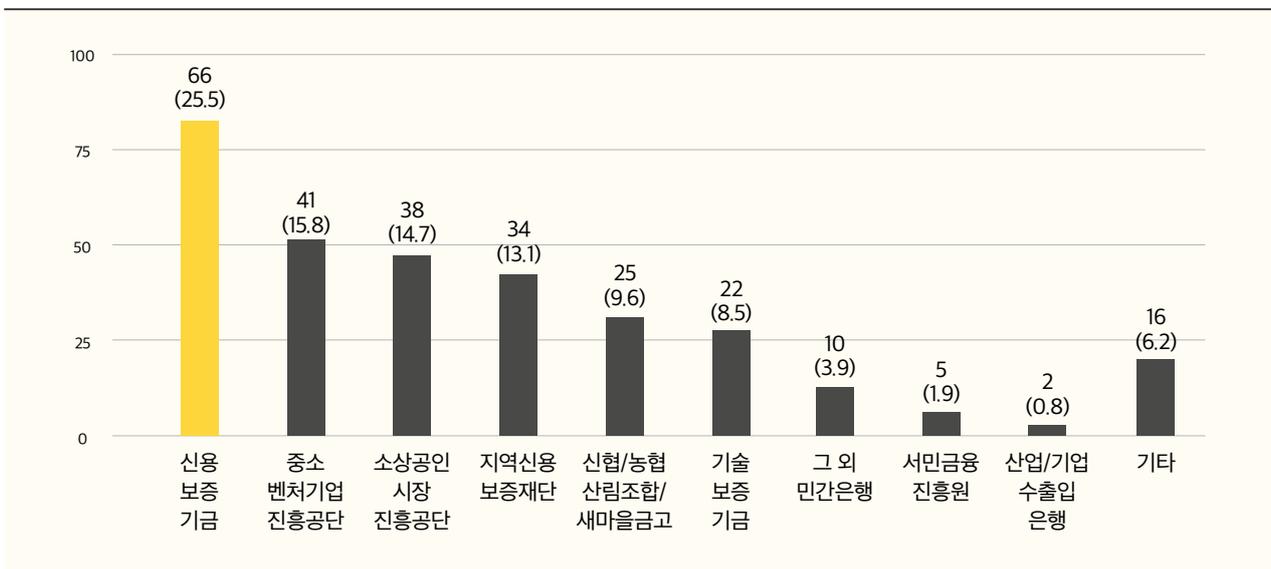


5 대출/보증 이용기관

- 대출/보증을 제공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이 66건(25.5%)이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41건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38건), 지역신용보증재단(34건) 등의 순
-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이 여러 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반면, 소셜벤처의 경우 주로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편중(69.2%)

<이용기관>

n=161, 단위: 건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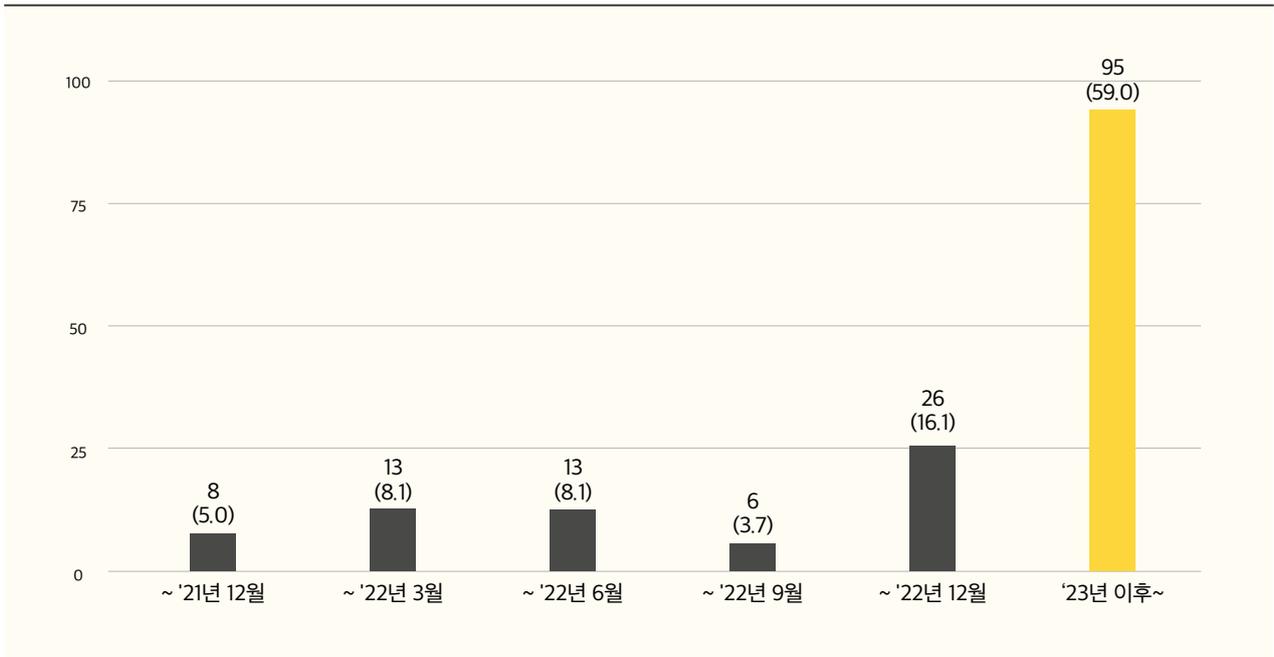
* 중복응답 포함

6 대출/보증 상환일

- 대출/보증 상환일은 '22년 이전이 약 5.0%, '22년 이내가 약 36.0%, '23년 이후는 약 59.0%로 나타남

<상환일>

n=161, 단위 : 개소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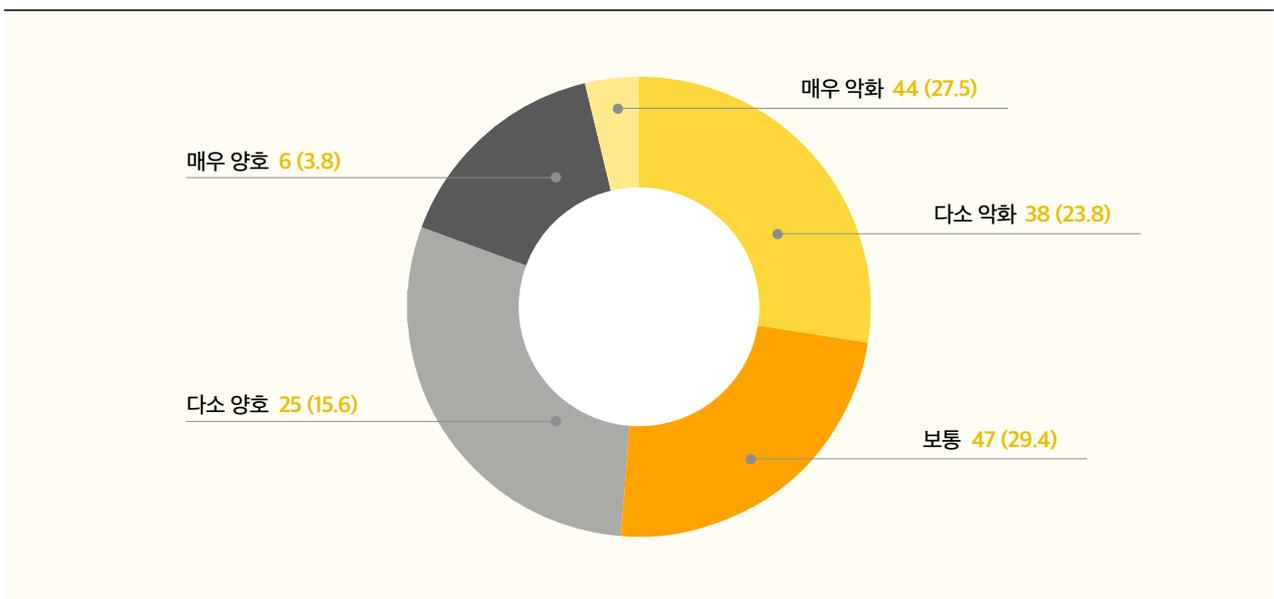


7 대출/보증 상환일 도래 이후 경영여건

- 상환일 도래 이후 예상되는 경영여건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일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47개소(29.4%)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매우악화(27.5%), 다소악화(23.8%) 등의 순
- 응답기업의 약 51.2%는 대출/보증 상환 이후 기업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평가

<상환 이후 경영여건 평가>

n=160, 단위 : 개소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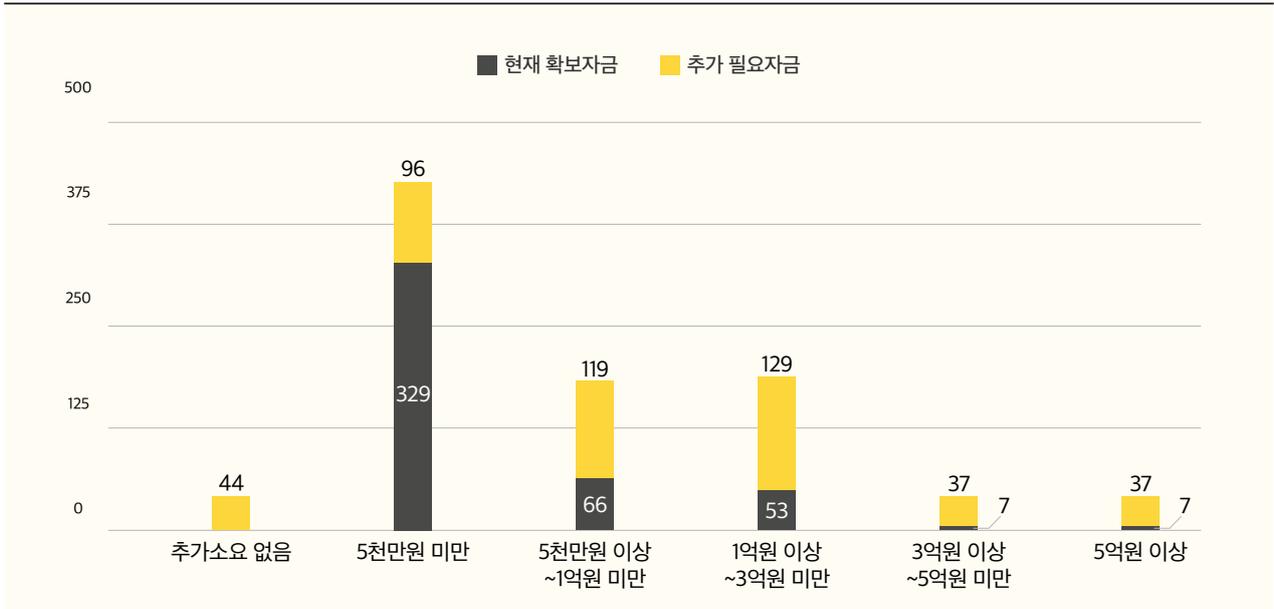


1 대출/보증 추가수요

- 총 462개 응답기업 중 기업 경영을 위해 추가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전체의 약 90.5%에 해당하는 418개 기업
- 응답기업 중 대다수 기업은 현재 확보한 자금이 5천만원 미만(329건, 71.1%)으로 나타났으며,
- 추가 필요 자금은 1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인 경우가 129건(27.9%)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이 119건(25.8%), 5천만원 미만이 96건(20.8%) 등의 순

<대출/보증 추가수요>

n=462, 단위 : 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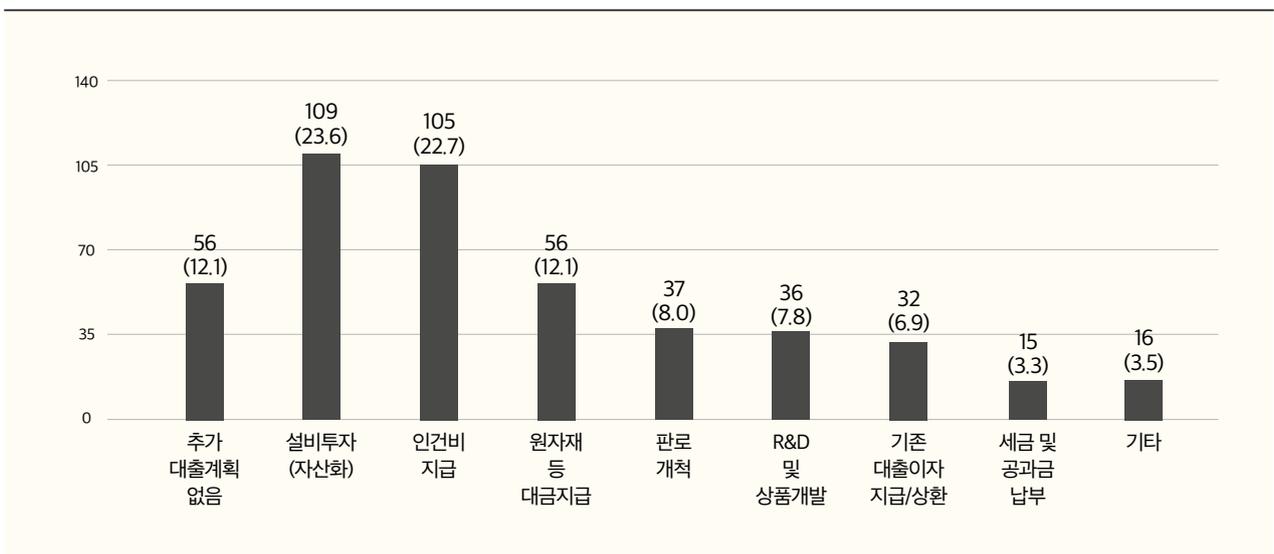


2 대출/보증 추가수요 사유

- 응답기업 중 약 87.9%에 해당하는 406개 기업은 추가 대출/보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4개 기업은 인건비 지급 또는 설비투자(자산화)를 목적으로 대출/보증을 이용할 계획

<대출/보증 추가 수요 사유>

n=462, 단위 : 개소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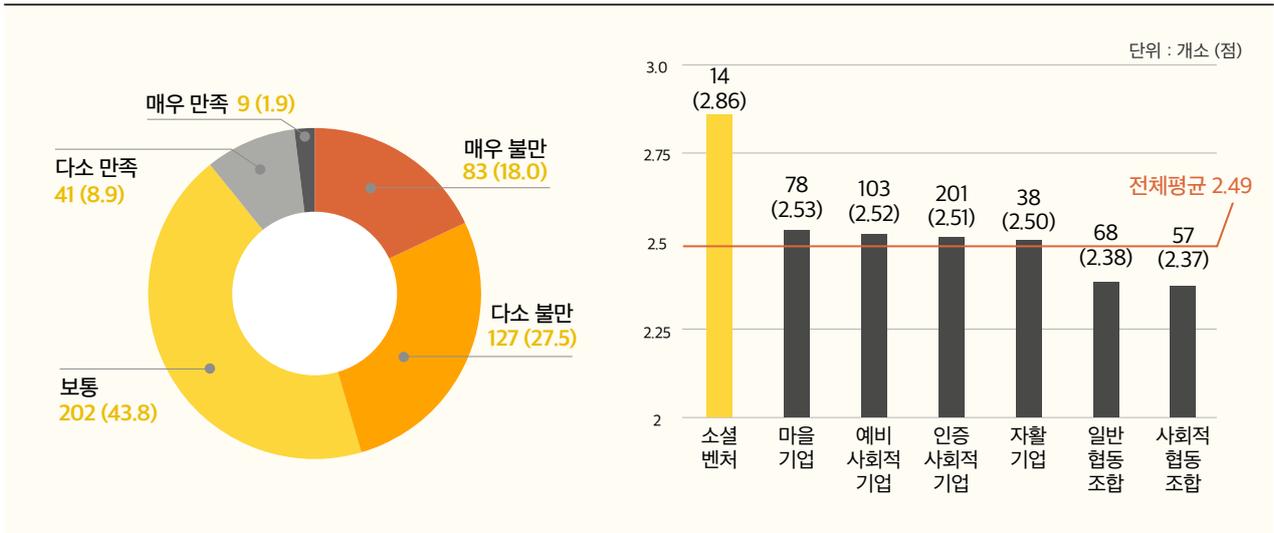
* 중복응답 포함

3 금융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

- 그간의 대출/보증 등 정부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.49점으로, 만족한다는 답변이 약 11%인 반면,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의 약 45%에 해당
- 이 가운데 소셜벤처의 평균점수가 2.86으로 가장 높았고,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각각 2.38점과 2.3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<금융지원 정책 만족도>

n=462, 단위 : 개소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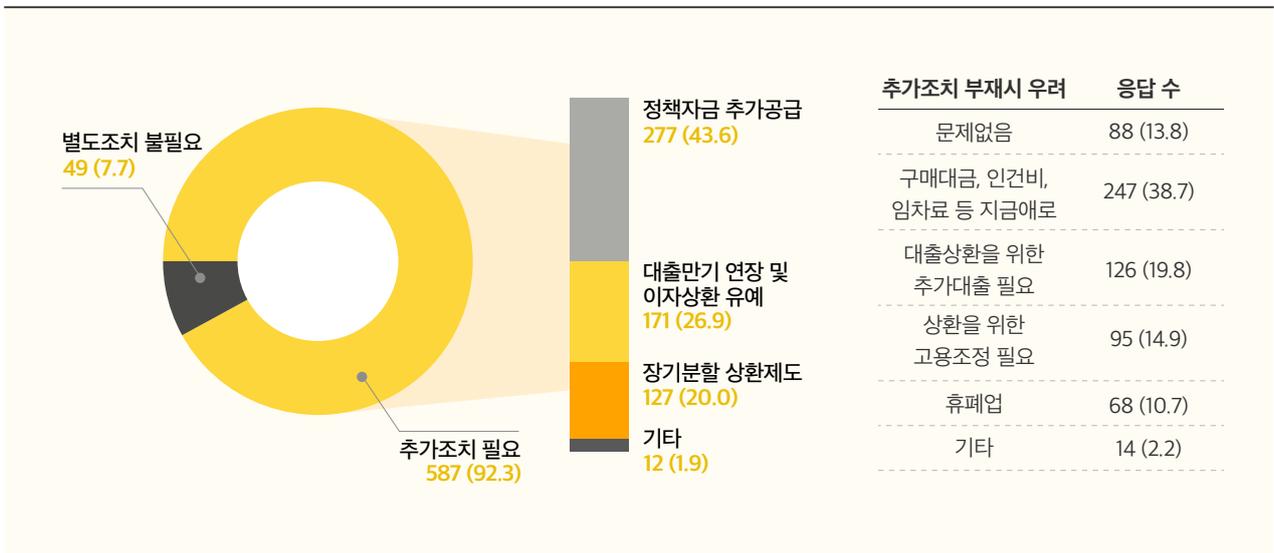


4 금융지원 정책 전반의 추가 정책 수요

- 대출/보증 지원 등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전반적인 금융지원 정책과 관련하여, 응답자들은 정책자금 추가공급(43.6%),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(26.9%), 기존 대출금에 대한 장기분할 상환제도 도입(20.0%) 등의 조치를 필요로 했으며,
- 이러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건비, 임차료 등 지급애로(38.7%), 추가대출로 인한 경영악화(19.8%), 고용조정(14.9%)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<금융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추가 정책 수요>

n=462, 단위 : 개소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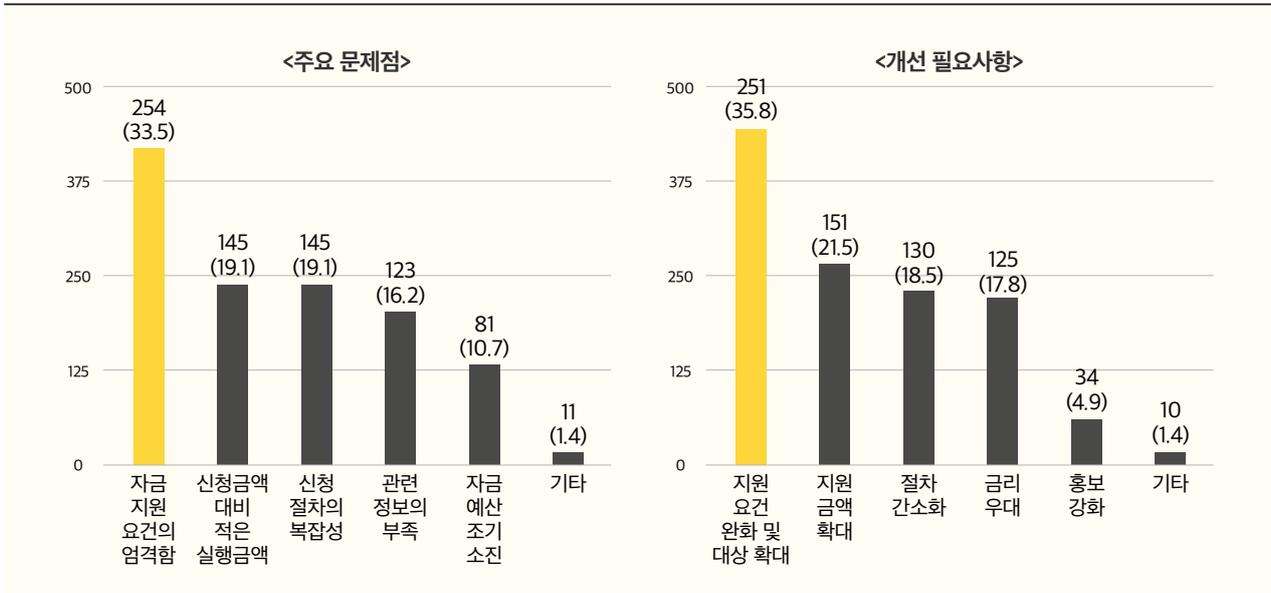
* 중복응답 포함

5 금융지원 정책 문제점/개선 필요사항

-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에 대하여, 주요 문제점으로는 자금지원 요건의 엄격함(254건, 33.5%)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, 개선 필요사항 또한 자금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(251건, 35.8%)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이 제기
- 그 외, 대출/보증 실행금액의 부족에 따른 지원금액의 확대와 신청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절차 간소화 필요성 등이 주요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됨

<금융지원 정책 문제점 및 개선필요 사항>

n=462, 단위 : 개소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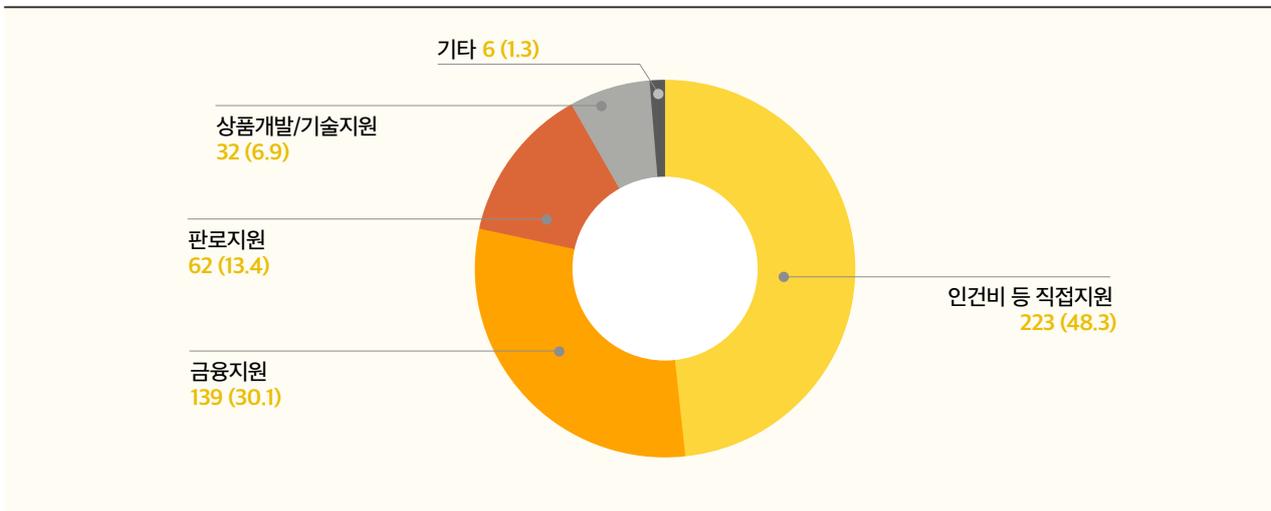
* 중복응답 포함

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필요 영역

-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영역으로는 인건비 등 직접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223건(48.3%)으로 가장 많았고,
- 그 다음으로 금융지원 정책(30.1%), 판로지원 정책(13.4%), 상품개발 및 기술지원(6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<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필요 영역>

n=462, 단위 : 개소(%)



IV. 주요 시사점 및 정책과제 도출

개선과제 ①

-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*에도 불구하고, 대출/보증 상품을 이용한 기업은 약 34.9%에 불과

* '20년 1~2분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여건 BSI는 33.82 ~ 82.56 수준(※ 주: BSI 0=완전한 불황, BSI 100=보합, 200=완전한 호황)

- 금융지원 상품을 미이용 사유로는 지원요건 미달(36.7%), 정보취득의 어려움(23.7%), 신청절차 복잡(14.4%) 등이 제시

* 신용보증기금은 법인대표의 신용등급, 연매출 등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며,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상당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인건비 지급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을 병행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 중

* 사업자 대출을 받는 기업 중 약 40.99%는 5천만원 이상 개인 대출을 이용하여 기업 경영에 활용

사회적경제기업의 **금융 접근성 강화**를 위해 **지원요건 완화, 신청절차 간소화, 정책홍보 강화** 등 대안 마련

개선과제 ②

- 대출/보증 상환 예정일은 대부분 '22년 4분기 이후(75.2%)이며, 대다수 기업(약 88.0%)은 추가 대출/보증을 계획 중

- 대출/보증 상환일 도래 이후 기업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전체의 약 27.5%에 해당

- 정부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.49점으로 낮은 수준이며,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,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

정책자금 추가공급,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연장, 장기분할 상환제도 도입 등 추가조치 검토

